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김종안, 최문식, 길청순, 황윤재



1

푸드플랜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

- 01 푸드플랜의 개념과 성격
- 02 푸드플랜과 농정의 관계
- 03 국가단위 사례
- 04 지역단위 사례
- 05 소결



1. 푸드플랜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

1.1. 푸드플랜의 개념과 성격

[문재인 정부 공약]

-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 도입
- 공공급식,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확대

[전세계 도시지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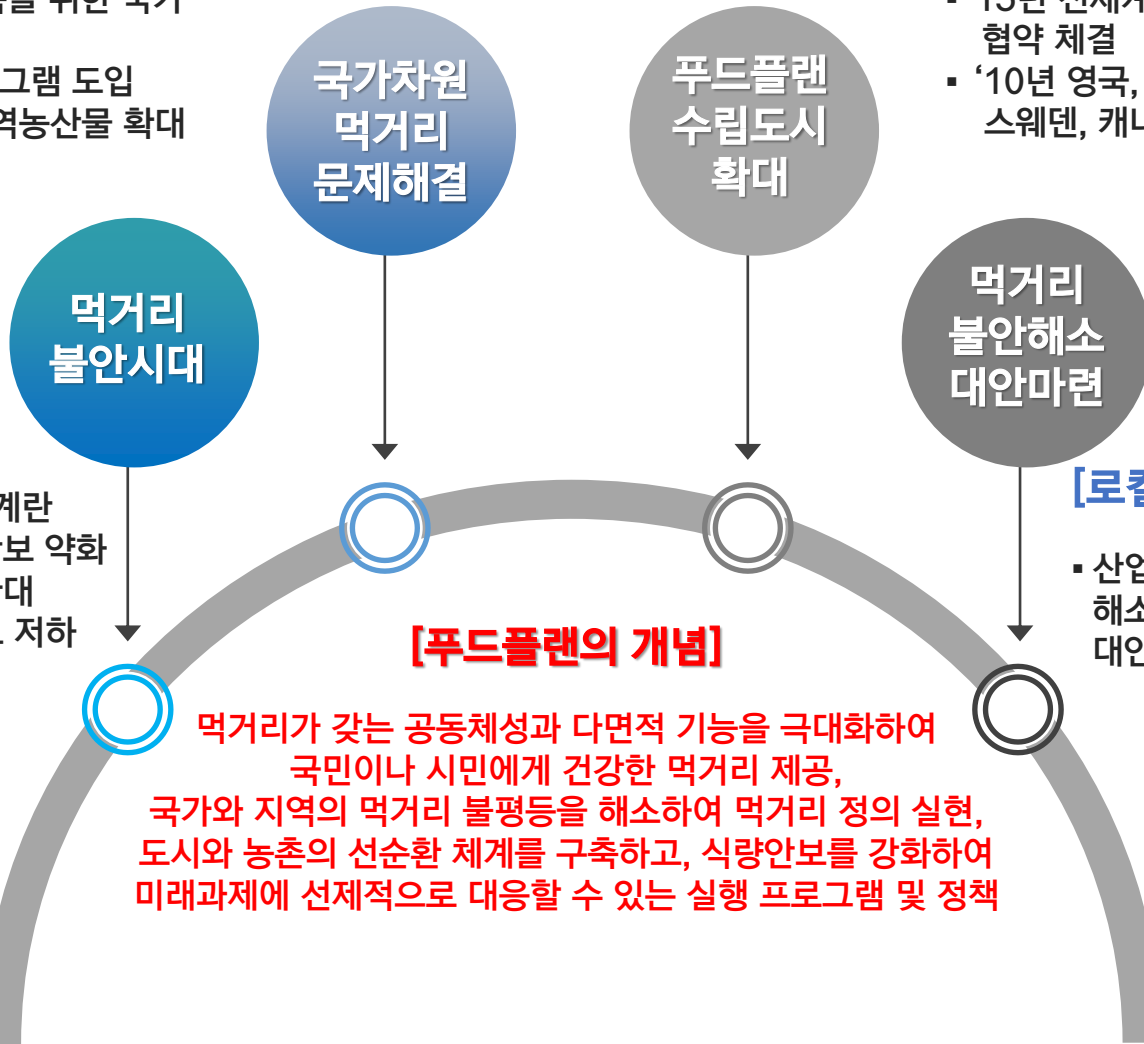
- '15년 전세계 150여개 도시 먹거리정책 협약 체결
- '10년 영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호주와 스웨덴, 캐나다 등 국가 푸드플랜 수립

[사회경제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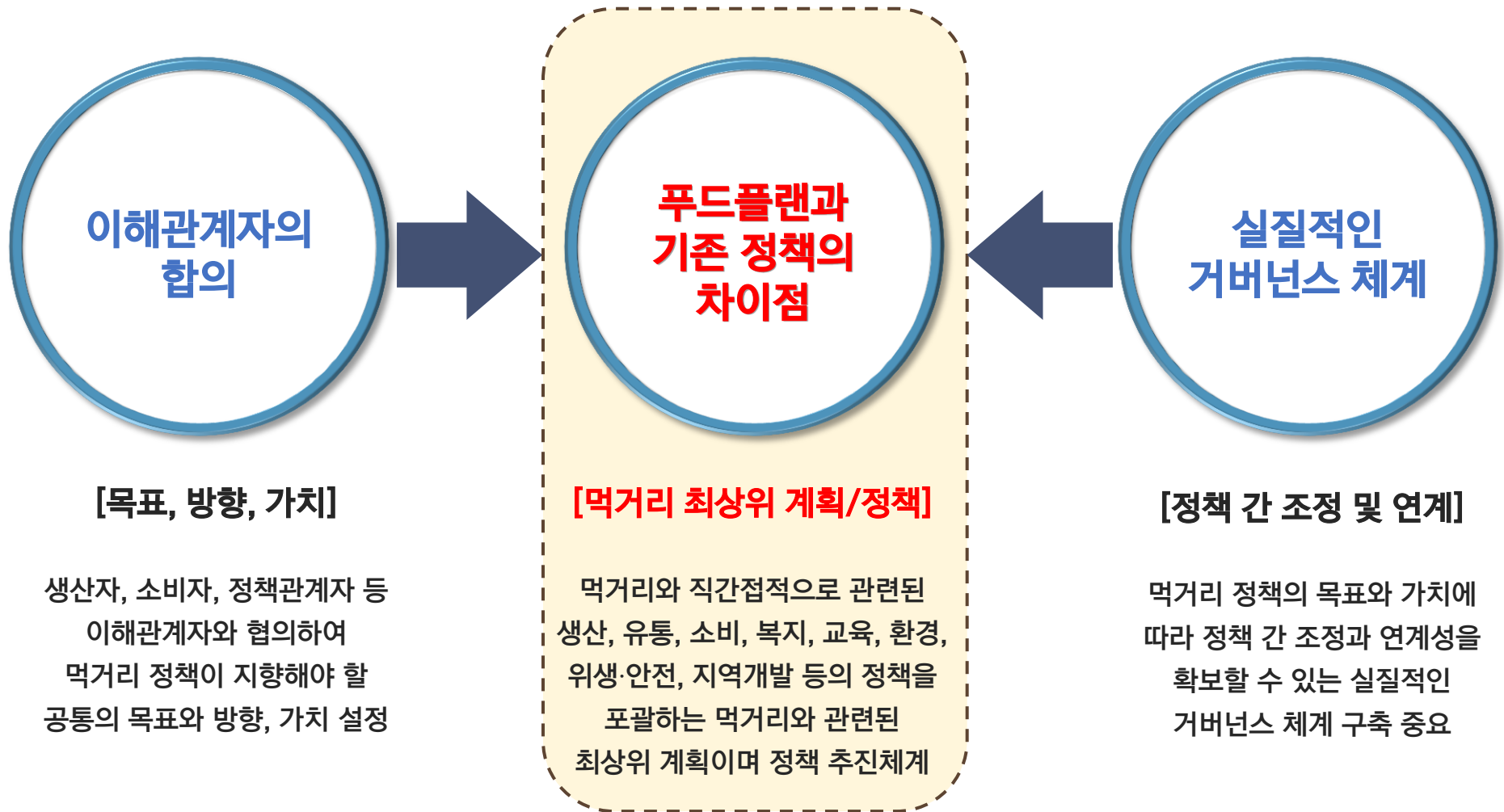
- 대형 먹거리 사고 : 살충제 계란
- 먹거리 불평등 심화, 식량안보 약화
- 식생활 불균형, 도농격차 확대
- 먹거리 정보 및 정책 신뢰도 저하

[로컬푸드, 대안먹거리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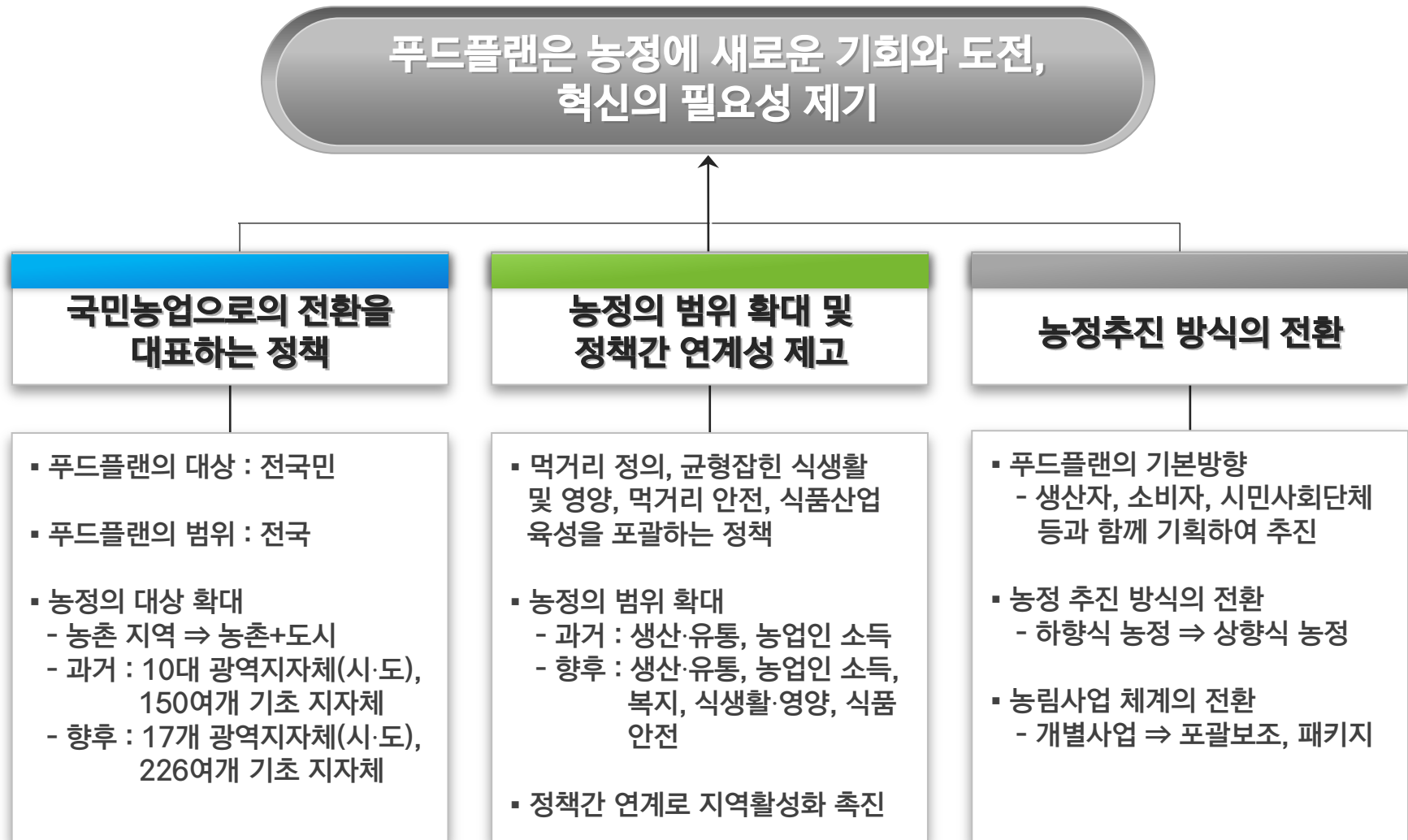
- 산업형 먹거리 체계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로컬푸드와 대안 먹거리 운동이 푸드플랜의 시초



1.1. 푸드플랜의 개념과 성격



1.2. 푸드플랜과 농정의 관계



1.3. 국가단위 사례

프랑스

목표

-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모든 국민이 접근하게 하는 것

특징

- 영국, 호주, 스웨덴 등과 달리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각 영역별 R&D 과제 구체적 제시
- 먹거리 정의와 고유의 식문화 보존·재창조 강조
- 먹거리 정의와 건강 먹거리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음

4대축

1. 먹거리 정의
2. 청소년 식교육
3. 음식폐기 감축
4. 지역 먹거리와 프랑스의 먹거리 유산 확립

국가 먹거리 프로그램

- 국가먹거리프로그램과 국가영양건강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용
- 건강한 먹거리 공급뿐만 아니라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경제 및 사회적 측면까지 프로그램에 포함

호주

목표

- 수출확대
- 산업 육성
- 취약계층 지원 및 해외 지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

특징

- 호주 식품산업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 성격
- 식품산업 육성에 초점

시사점

- 식품산업 육성 강조
- 식생활·영양의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약화
⇒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약화
-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 체계 의존
⇒ 정책 약화 요인으로 작용

1. 푸드플랜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

1.4. 지역단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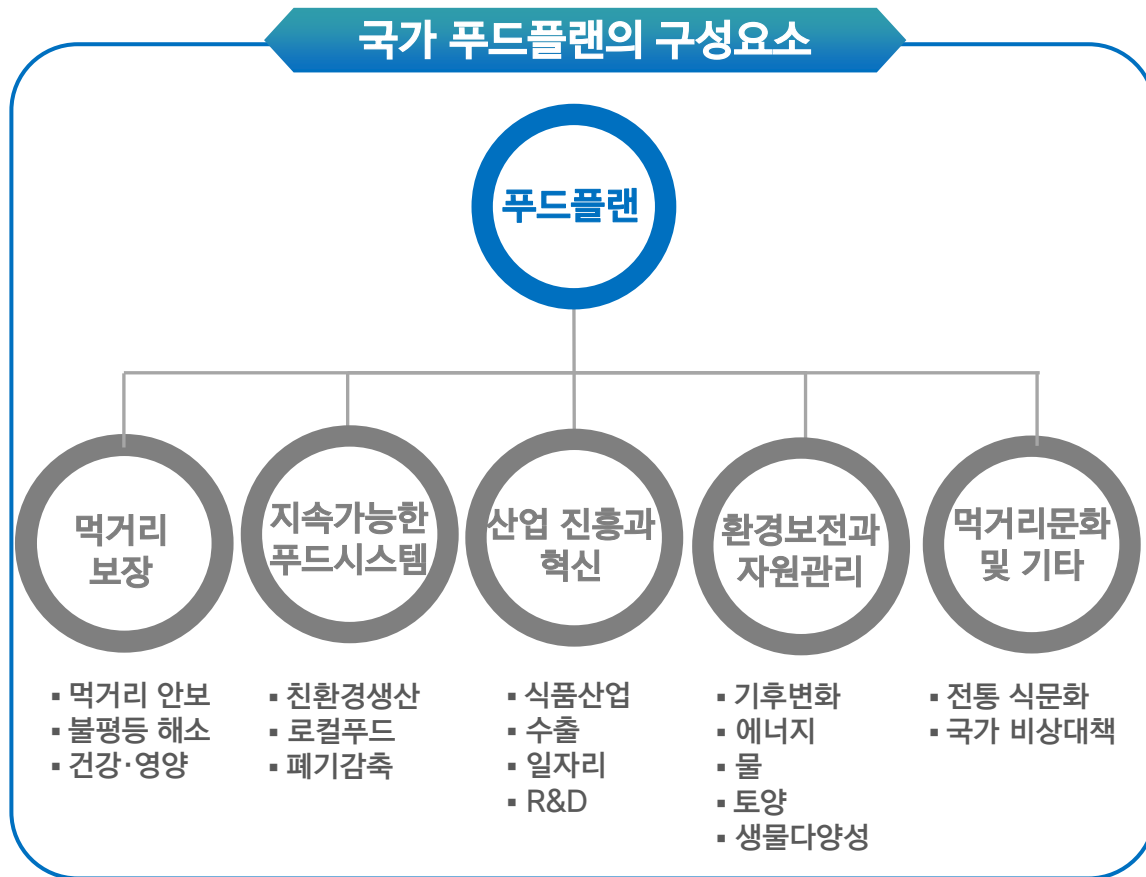
토론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토론토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간 먹거리 연결 증진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단계에 걸쳐 시민과 지자체가 해야 할 과제들은 건강, 사회정의, 경제, 환경·기후변화, 문화, 지역공동체의 6가지 측면에서 접근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의 모든 공무원은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먹거리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도록 의무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로컬푸드, 푸드뱅크 등 다양한 풀뿌리 운동에 기반하여 수립

서울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보장, 상생, 안전
정책 과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먹거리(5과제) ▪ 먹거리 보장(5과제) ▪ 상생 먹거리(5과제) ▪ 안전한 먹거리(7과제) ▪ 제도적 기반 구축(4과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 환경과 공간에 대한 요소까지 확대된 먹거리 2030수립 계획 함께 발표 ▪ 글로벌과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먹거리계획에 반영

1.5. 소결



국가 푸드플랜

- **'Food security'를 '먹거리 보장'으로 개념 확대**
-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하여 적용

지역 푸드플랜

- 구체적, 실행 가능한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추진
- 초기에는 시민들이 관심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의제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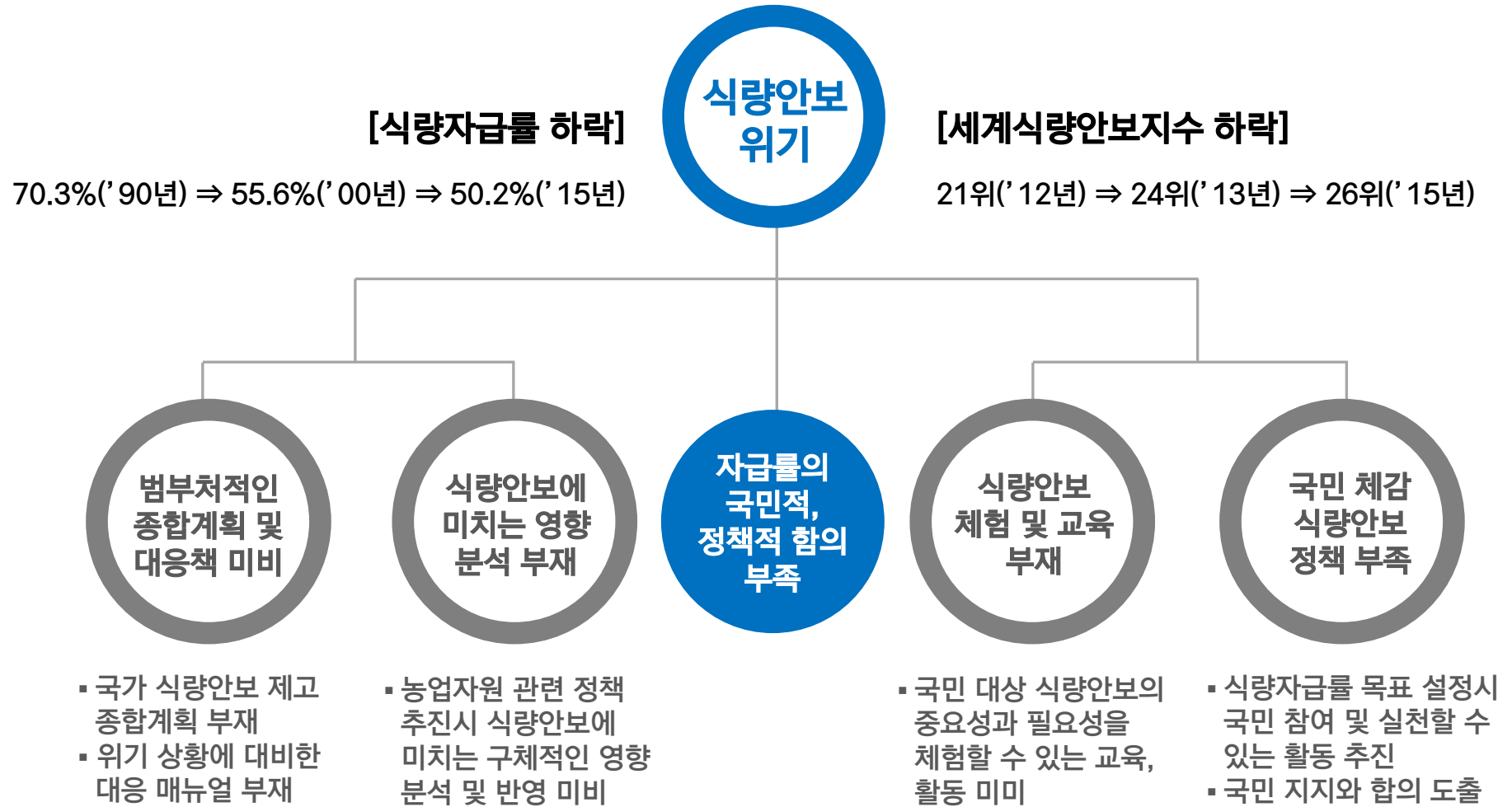
우리나라 먹거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01 식량안보 측면
- 02 먹거리 복지 및 식생활·영양 측면
- 03 먹거리 안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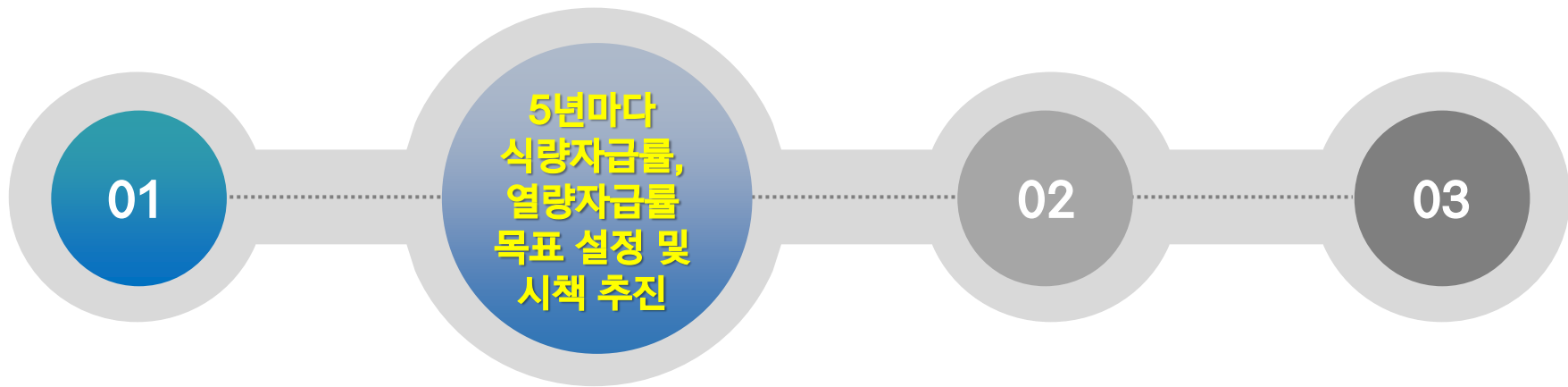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 식량안보 측면



2.1. 식량안보 측면

[자급률 목표 설정 방식의 문제점]



[사전연구, 사후평가 부족]

- 미래 위기상황, 인구, 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국민 수용의사 고려, 자급률 목표 수립

[연구/합의/협의 미비]

- 자급률 목표 설정 종합연구와 목표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타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미비
⇒ 정책적, 국민적 공감부족

[대상과 범위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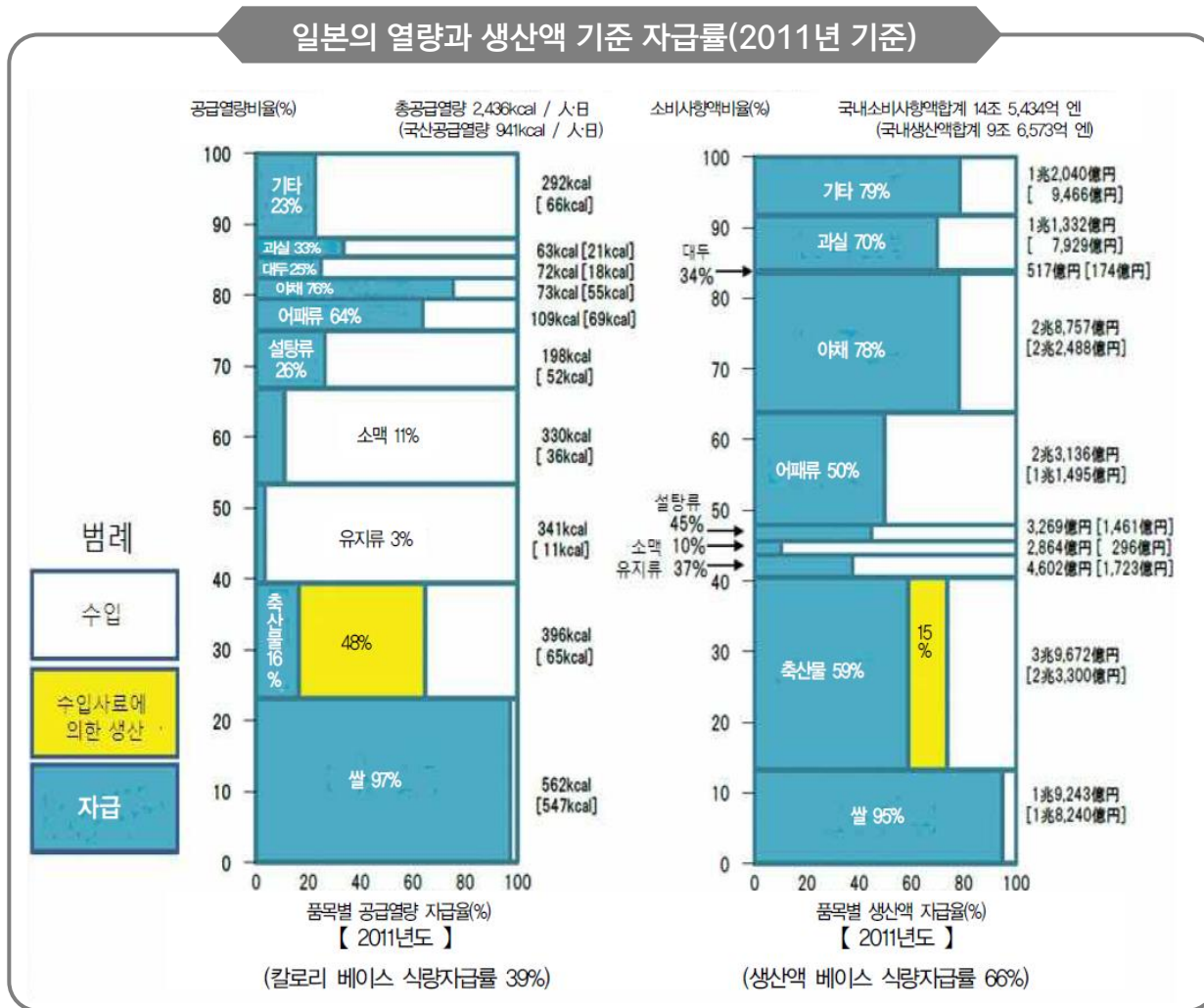
- 식량작물, 축산물, 식품의 자급률 설정 必
⇒ 식품의 명확한 규정부재 채소류, 과일류로 포괄되어 자급률 목표 설정

[열량자급률 정책 활용 低]

- 법적으로 열량자급률 목표 설정, 정책 활용 미비
- 국가와 지역의 부류별로 열량자급률 산출, 개선 필요
⇒ 먹거리 자급률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 제고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 식량안보 측면



일본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열량자급률 주기적 조사, 분석, 발표
 - 먹거리 안보 체감도 제고
- Food Action Nippon
 - '08년 농림수산성 산하 민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총리 비롯 사회 저명인사들이 일상 생활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활동에 참여하는 캠페인
 -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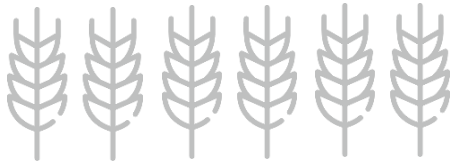


국민적 합의로 설정된 자급률은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농정 추진 및 예산확보의 근거가 됨.

자료 : 이철호,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세계농업 15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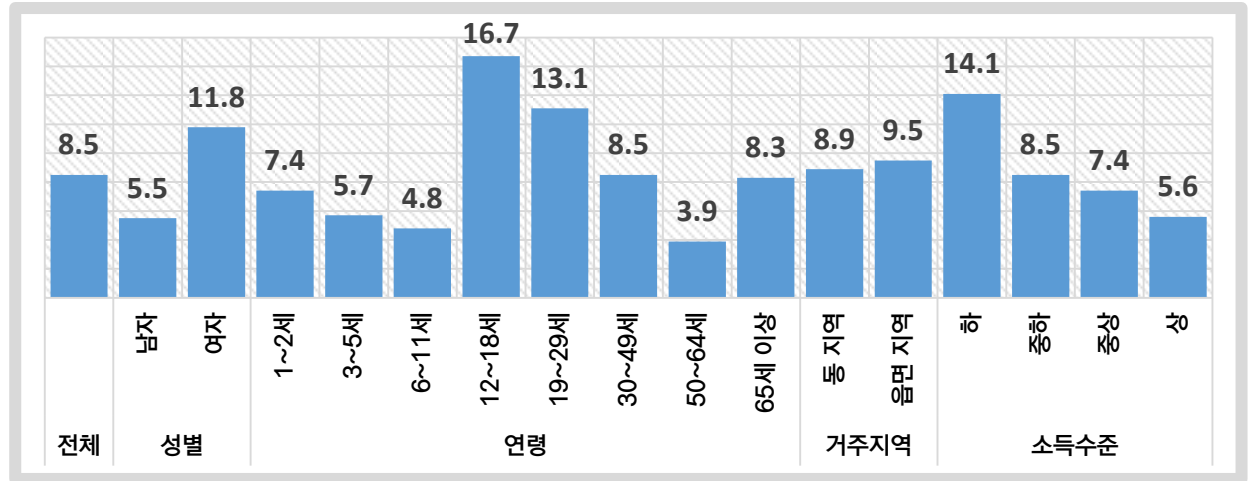
2.2. 먹거리 복지 및 식생활·영양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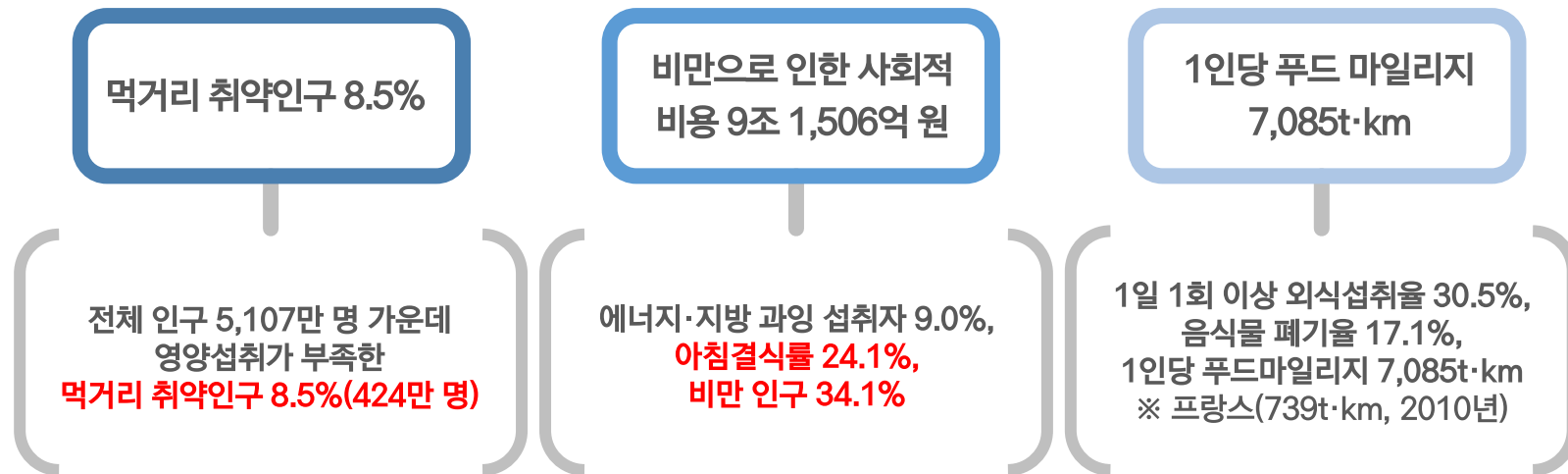
[영양섭취 부족자 현황]

※ 2015년 기준

- 01 먹거리 취약인구 8.5%
- 02 비만의 사회적 비용 9조 1,506억 원
- 03 1인당 푸드마일리지 7,085t·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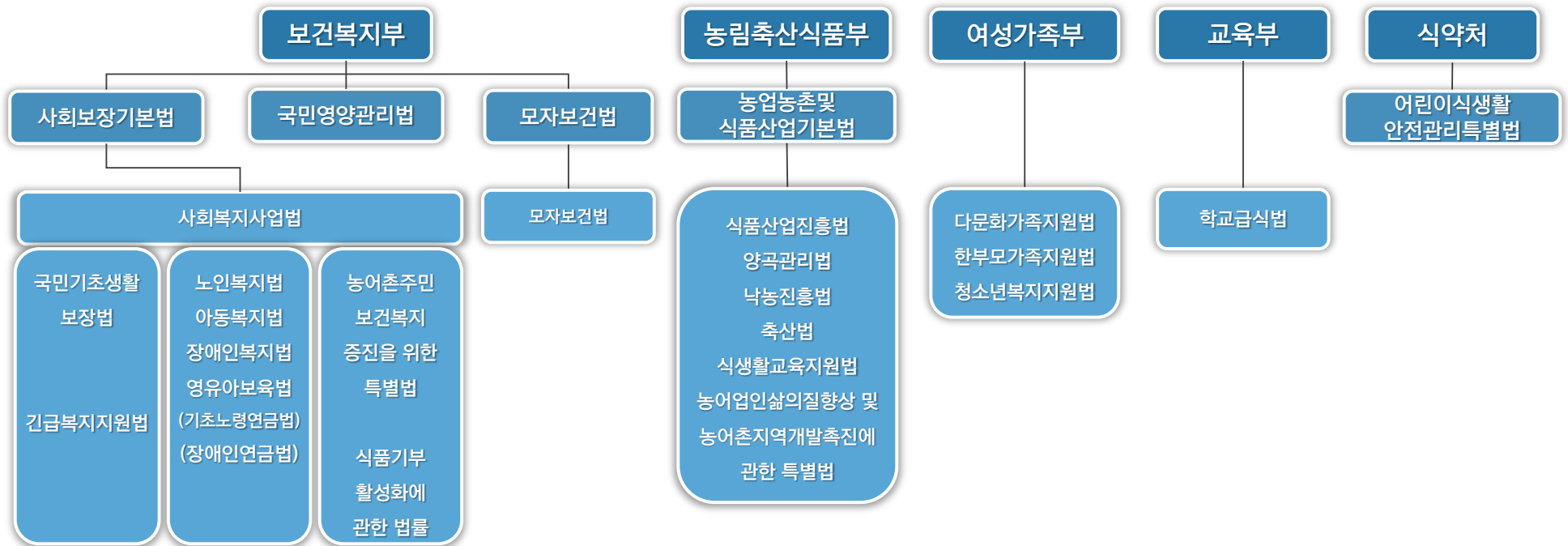


자료 : 이계임,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 안전·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토론회, 2017.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2. 먹거리 복지 및 식생활·영양 측면



자료 : 이계임 외,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36권 제2호, 2013, 일부 내용 보완.

- **각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먹거리 정의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구조 부재**
-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2030년까지 먹거리 취약계층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분야별·부처별 세부계획과 모니터링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체계 부재
- 영양정책과 먹거리 및 농업정책을 통합하는 체계와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성 高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2. 먹거리 복지 및 식생활·영양 측면

[취약계층, 학생·어린이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단계별 확대 및 건강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종합 대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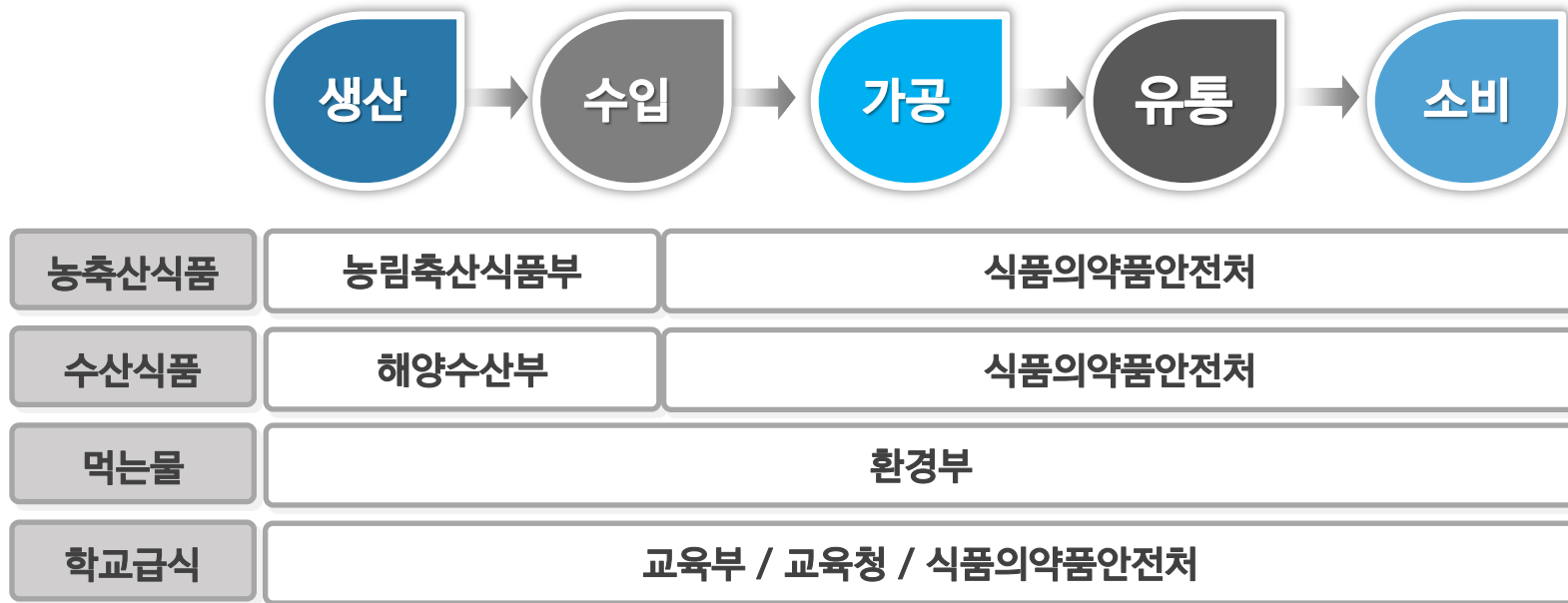
학교급식 인원수 ('16)				어린이집 인원수 ('16)		노인복지시설 규모 ('16)			공무원/대학생수 ('16)																																																																										
구분	학생수 (천명)			구분	인원수(천명)	구분	시설수 (개소)	입소 정원(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수 : 1,021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 650천명 - 지방직 371천명 대학생/ 대학원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2,051천명 - 대학원생 326천명 - 교직원수 75천명 																																																																										
	전체	급식	%							초등학교	2,699	2,699	100	총계	1,451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25	19,993	중학교	1,460	1,460	100	국·공립	176		양로시설	265	13,283	고등학교	1,744	1,738	99.7	사회복지법인	99		노인공동 생활가정	128	1,062	특수학교	25	25	98.8	법인·단체 등	45		노인 복지주택	32	5,648	합계	5,928	5,922	99.9	민간	746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요양시설	3,136	150,025					가정	329									협동	4								
초등학교	2,699	2,699	100	총계	1,451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25		19,993																																																																									
중학교	1,460	1,460	100	국·공립	176		양로시설	265		13,283																																																																									
고등학교	1,744	1,738	99.7	사회복지법인	99		노인공동 생활가정	128		1,062																																																																									
특수학교	25	25	98.8	법인·단체 등	45		노인 복지주택	32		5,648																																																																									
합계	5,928	5,922	99.9	민간	746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요양시설	3,136		150,025																																																																									
				가정	329																																																																														
				협동	4																																																																														
				직장	52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관련된 정책간 연계와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노력만으로 공공급식의 확대 한계
- 공공기관 급식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3. 먹거리 안전 측면

[식약처가 식품안전의 주관부서로 가공·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중심, 사후 대처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한계]



-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 식품안전성에 대한 평가 : 전문기관
 -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리 : 생산부터 가공·유통 전반에 걸쳐 농림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
- ⇒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으로 생산단계부터 관리되어야 함을 반영

2.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3. 먹거리 안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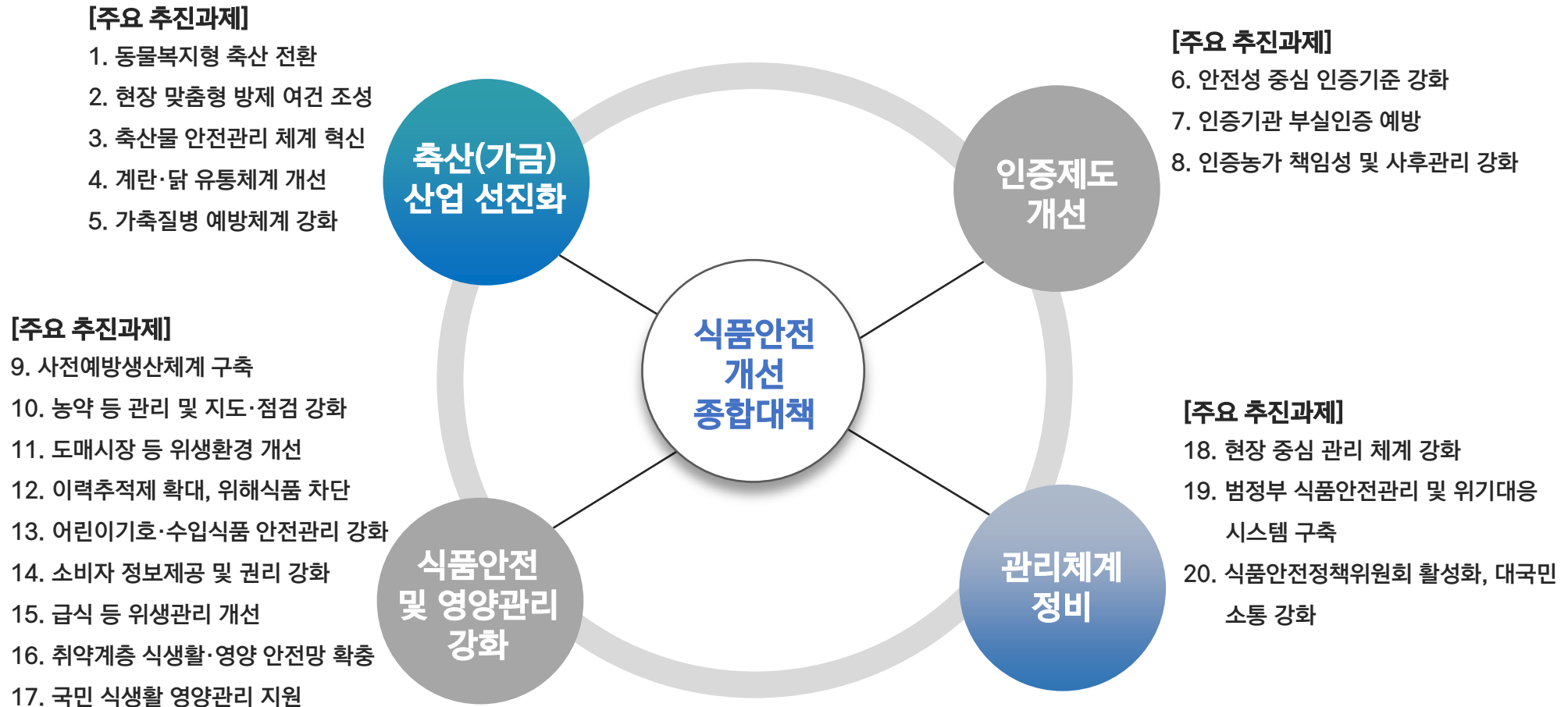
[해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 분	1차 생산		2차 생산		유통	소비
	재배/사육 등	수입	국내가공	수입	보관, 운반 등	최종판매단계
독일	농업식품부 식품검사청 ▪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맡음					
캐나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 보건부 : 식품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유통, 소비단계: 통상 주정부 담당)					
스웨덴	농업부 국립식품청 ▪ 주요업체(약 600개소)는 농업부에서, 기타업체는 지방정부에서 관리					
프랑스	농수산부				고용사회연대부	
	▪ 식품위생안전청: 식품안전성 평가 * 경제재정산업부: 표시기준 등					
호주	지방정부	농림수산부	지방정부	농림수산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 호주 식품기준청: 식품기준설정, 안전성 평가 등 실시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항만위생청	지방정부	항만위생청	지방정부	
	▪ 호주 식품기준청: 식품기준설정, 안전성 평가 등 실시					
일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 식품안전위원회 : 식품안전성 평가 및 정보교류 담당					

자료 : 강경선 외,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서울대학교, 2008.

2.3. 먹거리 안전 측면

['17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 체계 강화 추진, 식품안전체계의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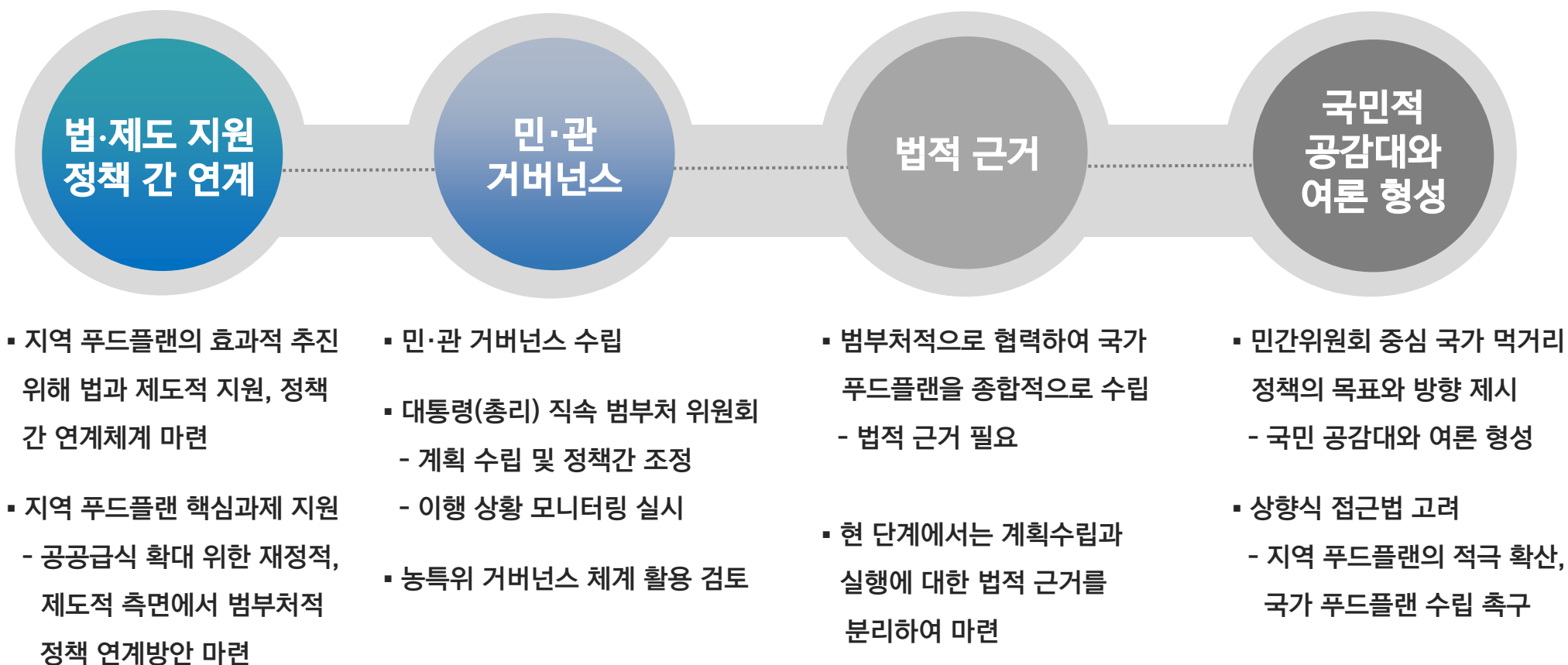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 01 국가 푸드플랜
- 02 지역 푸드플랜
- 03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 04 정책연계 및 제도개선 추진
- 05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3.1. 국가 푸드플랜

[범부처 차원의 식품정책 방향 제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3.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3.1. 국가 푸드플랜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과제(안)]

목표	국가적 차원의 식량안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먹거리 보장 확대				농식품 생산·유통·소비·폐기의 먹거리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			
	안보	안전	복지	식생활·영양	정보·문화	생산	유통·소비	폐기·순환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 농식품의 식량안보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자급률 설정 - 비상시 대응 방안 및 국민참여 방안 ② 공공급식 확대와 식생활·영양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 확대 방안 - 과일·채소 간식의 단계적 확대 방안 - 취약계층 영양공급 확대 방안 - 국민 식생활개선 체계화 등 ③ 소비자관점 식품 인증·정보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표시제 개선방안 검토 - 국제기준을 고려한 식품표시제 개선 - 고령화대비 농식품 표시 개선 방안 - 먹거리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환경보전형 농식품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용수 안전성 강화 방안 - 탄소배출 저감, 생물다양성 확보 등 ⑤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 -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활성화 - 식품 로스 감축 방안 ⑥ 푸드플랜 관련 R&D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미래예측 고도화 - 통계 개선방안: 식품, 영양, 복지, 로스 등 - 식품로스 감축 방안 - 환경보전형 생산기술·효과측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푸드플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먹거리관련 국가적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예측 고도화 ▪ 중앙정부 부처간·부처내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민·관 거버넌스 강화 							

3.2. 지역 푸드플랜

[기획생산·공급계약]

- 농촌 : 중소농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확대
- 도시 : 농촌지역과 공급계약
- 지역 가공식품 업체와의 연계 확대
 - 마을 공동가공, 6차산업, 중소가공업체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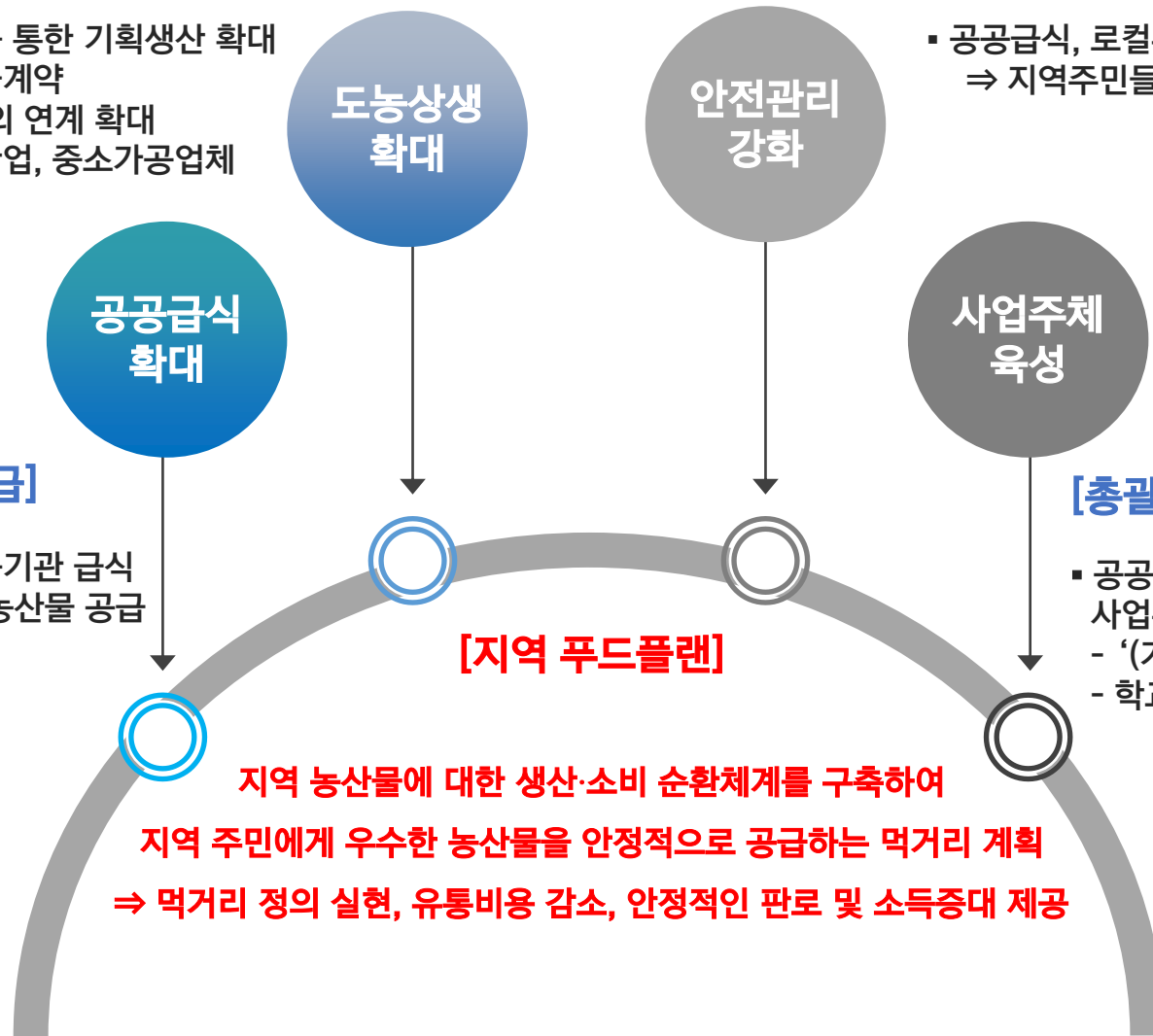
- 공공급식,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강화
⇒ 지역주민들의 신뢰도 제고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 지역단위 공공급식, 공공기관 급식 확대를 통한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

[총괄지원 사업주체 육성]

- 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업의 총괄지원 사업주체 적극 육성
 - ‘(가칭)푸드통합지원센터’
 - 학교급식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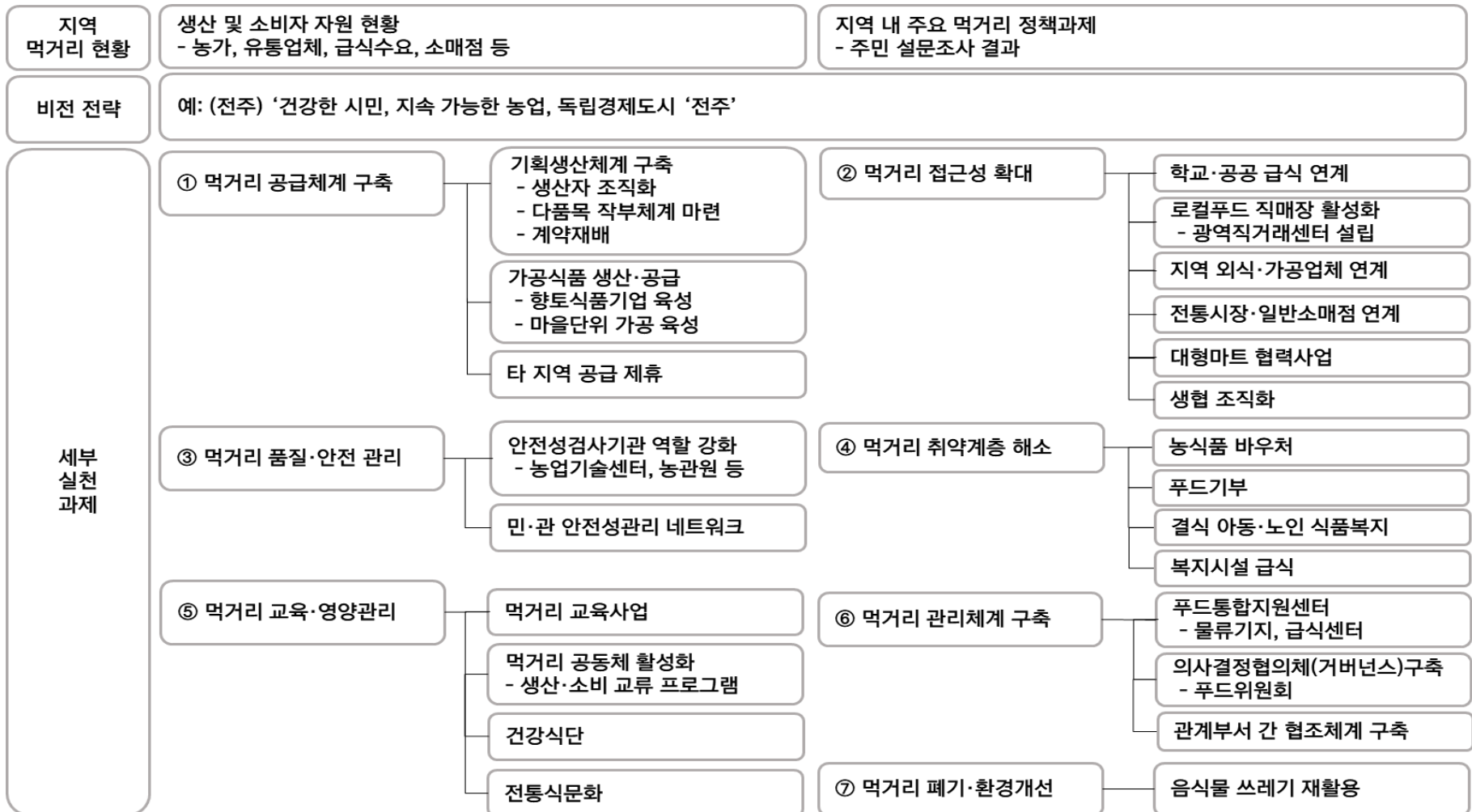


**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계획
⇒ 먹거리 정의 실현, 유통비용 감소,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증대 제공**

3.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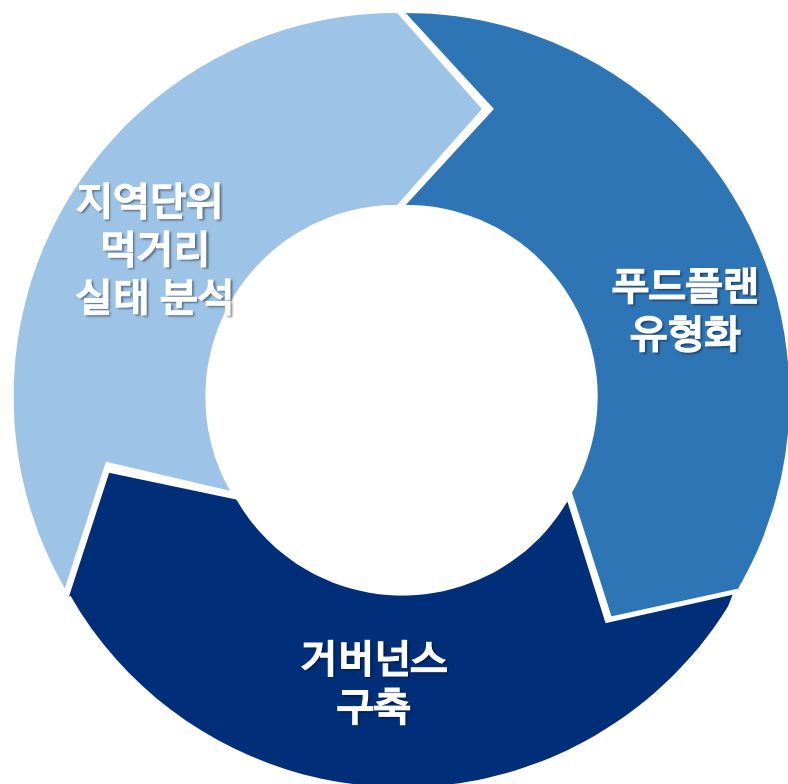
3.2. 지역 푸드플랜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체계(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안)", 2017.

3.2. 지역 푸드플랜



[지역 푸드플랜 추진방향]

지역단위 먹거리 실태분석

- 지역의 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지원
- 거버넌스 활성화 : 정책간 연계·조정, 지역사회 역량강화

푸드플랜 유형화

- 도시지역 기초자치제인 '구' 단위의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푸드플랜 유형별 지원 검토필요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거버넌스 구축

- 기존 사업과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정책시스템
- 지자체 내 정책간 연계 및 부서간 거버넌스 구축 유도

3.3.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 3.3.1. 기초연구와 공감대 확산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정책·제도에 대한 분석, 기초자료 축적 필요
-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기획, 실행, 성과 공유
- 보건·영양·환경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必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및 연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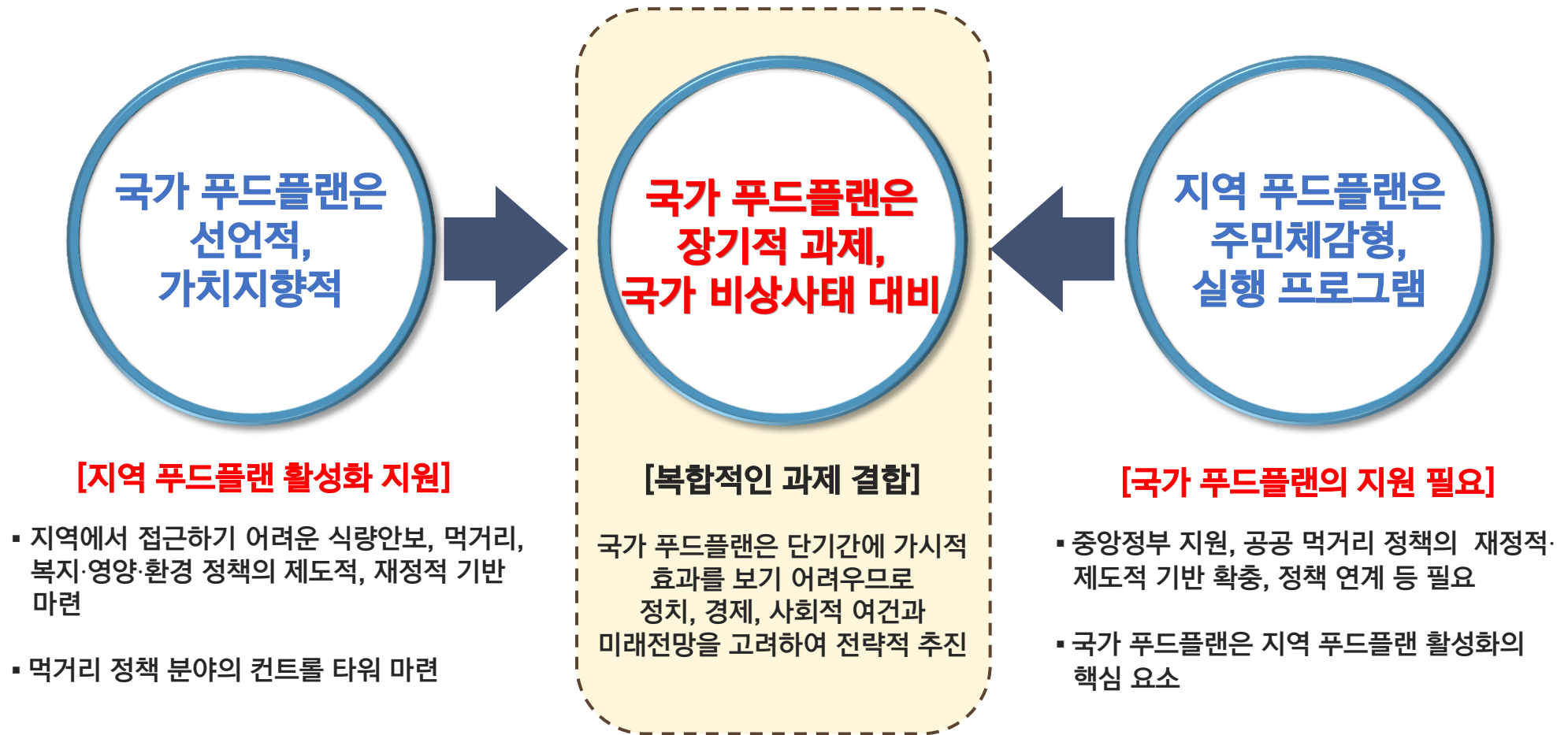
-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연대활동 강화 필요
- 먹거리 이슈 상시적 파악,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 필요

[푸드플랜은 국민농업으로 전환하는 첨병 역할]

푸드플랜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먹거리(식품)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
농정의 대상과 영역을 국민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제 역할 수행

3.3.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 3.3.2.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의 관계 정립



3.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3.3.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 3.3.3.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3.3.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 3.3.4.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및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 육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제도화
- 푸드플랜 추진 지역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운영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 육성]

-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정 역할
 - 서울시 : 정책 조정 코디네이터 도입('17년)
 - 밀라노 : 정책조정관(부시장) 1명, 보좌역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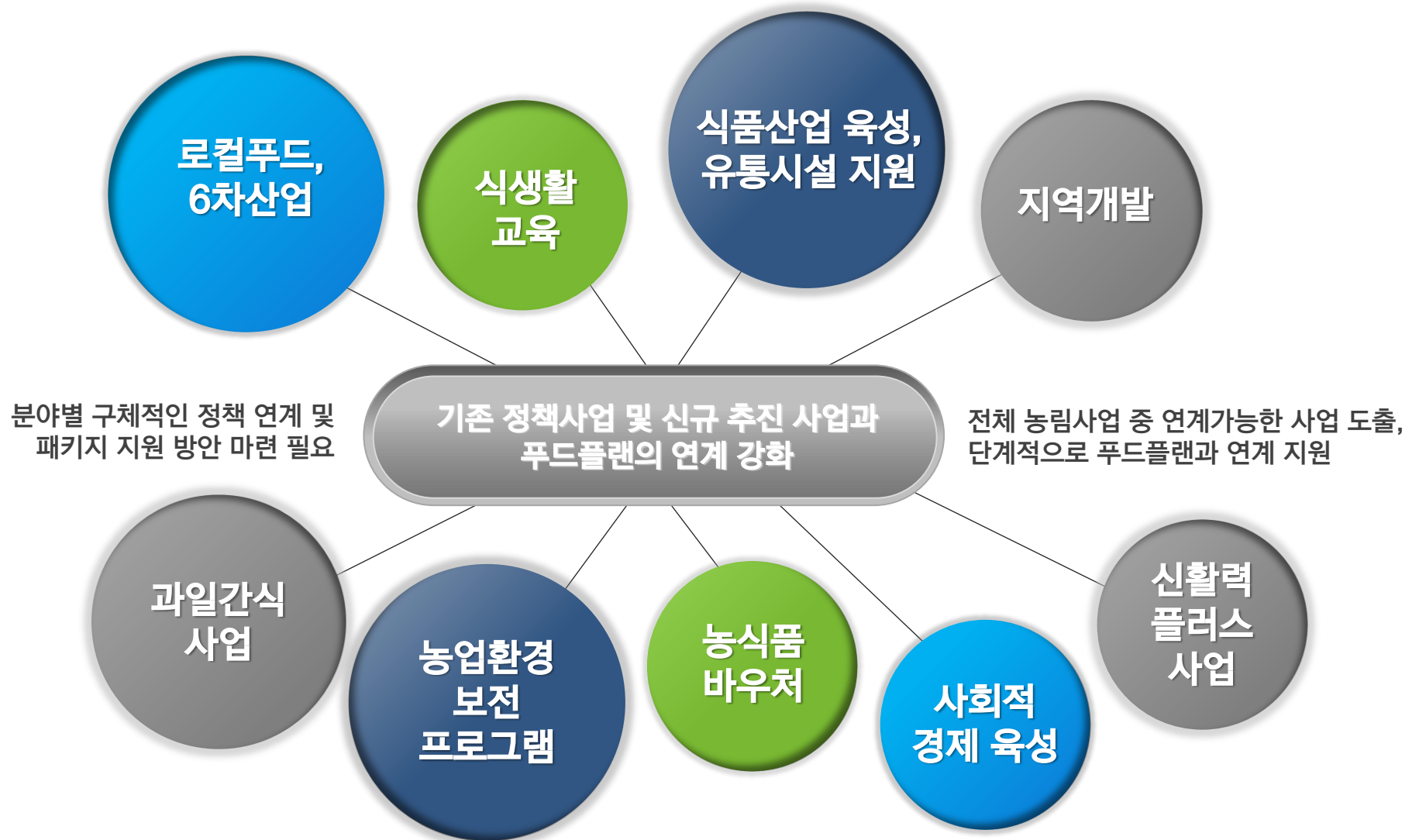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강화 지원]

푸드플랜의 확산으로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성 구비 지원

3.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3.4. 정책연계 및 제도개선 추진

\ 3.4.1. 농림사업간 연계 체계 구축



3.4. 정책연계 및 제도개선 추진

3.4.2. 공공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 제도개선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지방계약법 제25조 개정
 -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 2천만원 수의계약 기준 완화

[군대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군 급식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 고시’ 확대
 - 접경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확대
 - 국방부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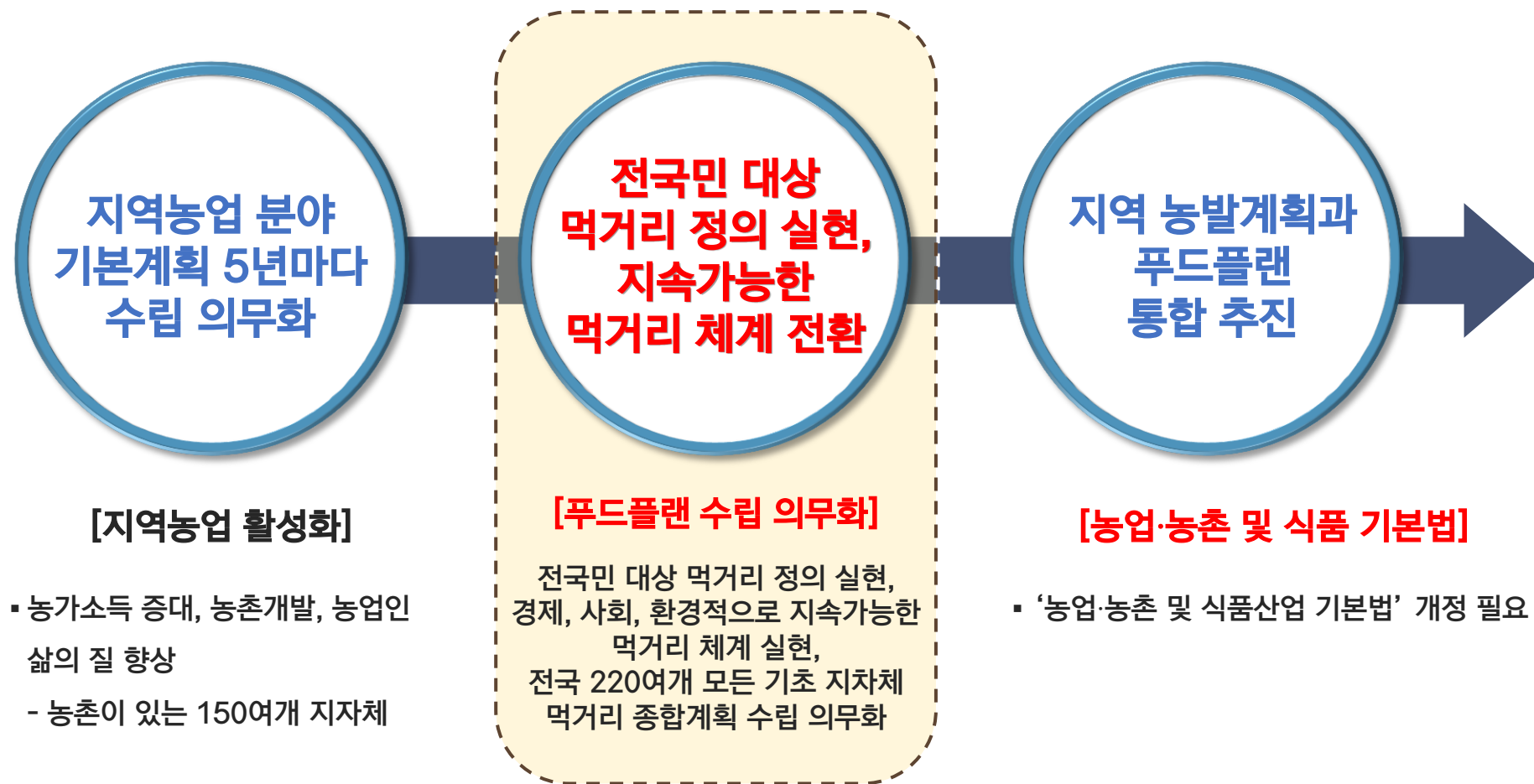
[바우처 도입, 단체급식으로 확대]

- 생계급여지원사업 연계 농식품 바우처 도입
- 아동·노인급식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국공립 병원, 교도소 등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
 - 관계부처와 협의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 급식기관 선정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우선 구매 제도 마련

3.5.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감사합니다
Thank you

농업전망